

04

글로벌 금융위기와 동아시아 무역체제 격변의 서막 혹은 찻잔 속의 폭풍?

| 문 |

Contents

1. 서론
2. 위기의 원인과 동아시아: 글로벌 불균형
3. 위기의 경과와 동아시아: 위기극복의 견인차
4. 위기의 파급효과와 동아시아: 은밀한 보호주의?
5. 위기와 동아시아 무역체제
6. 결론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는 그 발생과 심화 그리고 회복에 걸쳐 동아시아 국가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 글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동아시아 무역의 흐름 및 지역무역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기의 진행과정에서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은 가장 빠른 회복을 보여 주었으며 세계경제 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전 세계의 대중국 수출의존도,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중국 의존도가 높아졌으며, 동아시아 지역의 역내 무역비중 역시 높아졌다. 경제위기의 와중에 '점보 차별조치'나 반덤핑/상계관세조치 등 은밀한 형태의 보호주의는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경제의 대상인데, 현재 보호주의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다자무역체제의 질서와 양립할 수 있는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 글로벌 위기가 동아시아 무역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하는 서막인지, 아니면 일회적으로 소멸될 찻잔 속의 폭풍인지 아직 예단할 수는 없다. 현재의 위기가 지구적/지역적 차원의 무역체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권력적, 이념적 토대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동아시아 무역체제의 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에는 한계가 뚜렷해 보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1997/1998년 동아시아 위기에 비해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더욱 유리한 물질적, 이념적, 제도적 토대와 조건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나(무역)지역주의로 나아갈 적극적 동력은 미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주제어

글로벌 금융위기, 동아시아, 중국, 무역체제, 지역주의,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1. 서론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으로 현실화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국제 금융질서와 통화체제의 문제점을 노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내생산과 국제무역의 급격한 위축이라는 실물경제 상의 총체적 충격을 가져왔다. 미국에서 촉발된 위기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불문하고 전 세계로 즉각 전파되는 '거대한 동조화(Great Synchronization)'를 보였다. 2009년 상품수출은 12% 감소하여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감소를 기록하였고,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는 매우 급속하게 위축되거나 붕괴되었다.

1930년대 대공황(Great Depression)이 각국의 보호주의와 경쟁적 화폐가치절하(competitive devaluation), 근립공핍화 정책과 무역전쟁, 폐쇄적 무역블록 구축, 세계적 장기불황 그리고 기존 패권질서의 해체와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형성이라는 대격변을 거쳤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의 금융위기도 그것이 세계경제의 심장부인 미국에서 발생했다는 점, 위기가 매우 신속하게 유럽과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는 점, 위기의 원인이 장기적으로 누적된 국제금융과 무역체제의 모순과 불균형에 있다는 점 그리고 기존 패권질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회의와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한다는 점 등에서 과거의 대공황과 비견될 만한 특성을 보여주었다.

위기의 파고가 한 차례 지나간 후, 세계적 차원에서 생산과 교역은 신속하게 회복되어 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정상화된 듯 보인다. 2010년의 상품수출은 14.5% 증가를 기록했으며 (이것은 1950년 무역 데이터가 작성된 이후 최고 수치이다) 2011년 역시 3.6%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¹⁾ 중동의 정정불안에 따른 유가폭등 우려, 지진과 원전피해 수습과정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일본 그리고 PIGS의 위기 만성화에 따른 유로지역의 장기 침체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금융위기 초기에 제기되었던 세계경제의 붕괴나 무역전쟁의 발발과 같은 위기의식은 어느 정도 불식된 듯 보인다.

보호주의 확산과 무역전쟁과 같은 첨예한 국가 간 갈등은 성공적으로 회피되고 있다. 물론 현재의 무역갈등이 (30년대 관세전쟁이 아닌) 보조금전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경고도 없지 않으나 무역분쟁은 WTO 다자무역체제의 틀 내에서, 또는 양자적·지역적 제도를 이용하여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다자 및 지역무역제도들이 개별국가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감시하고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긴밀하게 연결된 글로벌 생산네트워크로 인하여, 수입제한적 보호주의가 오히려 자국의 수출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폐쇄적 지역블록화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매력적인 정책수단으로 간주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가 미국에서 촉발된 것이기는 하지만, 위기의 발생과 전개과정 그리고 현재의 잠정적 회복국면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지역과 주

1) World Trade Organization, "Trade growth to ease in 2011 but despite 2010 record surge, crisis hangover persists." Press Release, 7 April, 2011.

요 국가들은 문제의 발생과 해결에 있어 핵심적인 주체로 지목되어왔다. 이 글의 목적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동아시아 무역의 흐름과 체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또한 위기의 전개과정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개별적 혹은 집단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현재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동아시아 무역질서의 재편과 제도적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가늠해보고자 한다. 상호 밀접하게 연관된 몇 가지의 주제를 다음의 순서로 다루어 볼 것이다.

첫째, 금융위기의 원인과 관련하여 흔히 제기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 (특히 중국) 책임론을 간략히 검토해볼 것이다. 일부에서는 중국을 비롯하여 일본, 한국 등 대다수 동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주도형 성장전략, 과잉저축과 과소소비, 외환보유고 비축 등 글로벌 불균형을 이번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외부책임을 강조함으로써 위기조정의 비용을 무역수지 흑자국에게 전가하기 위한 정치공세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는 위기의 원인 자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생략하고, 향후 무역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는 환율저평가와 환율개입의 문제만 간략히 검토해볼 것이다(2장).

둘째, 위기의 진행과정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은 (여타 지역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급격한 무역위축의 타격을 받았지만 회복국면에서는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즉, 세계적 경제성장과 교역확대의 견인차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여타 지역과 비교할 때 역내교역의 비중 역시 증가하고 있다. 전 세계적 차원에서 중국의 경제적 비중이 증가해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번의 위기를 거치면서 세계 교역과 성장의 대중국 의존도는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중국 의존도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대중국 의존도 증가는 더욱 두드러진다. 3장에서

는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무역의 흐름과 패턴에 어떤 특기할 변화가 있는지 검토해본다.

셋째, 글로벌 위기가 동아시아 국가들의 무역에 미치는 직접적인 파급효과 가운데, 특히 보호주의의 강화 및 이에 대한 대응의 문제는 독립적인 주제로 다룰 필요가 있다. 정부지출과 유동성 공급을 최대한으로 늘려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사라지고 부작용이 부각되면서, 이제 각 국가들은 나름의 출구전략을 실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각 국가들의 긴축정책이 불가피해지면서, 만성불황이나 더블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국가들은 국내 산업들로부터 높은 보호주의 요구에 직면하게 된다.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수출을 확대하고 성장률을 제고하려는 유혹도 강해진다. 은밀한 형태의 보호주의(murky protectionism)는 위기의 긴박성을 이유로 이미 주요 국가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보호주의조치의 가장 주요한 타깃은 중국을 위시한 동아시아 국가들이며, 그 반작용으로 동아시아 국가들 역시 이러한 수단에 의존하게 된다. 4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호주의의 확산, 미-중 통상분쟁의 격화 등을 살펴보고, 다자적/양자적 틀을 통해 현재 보호주의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넷째, 글로벌 위기가 동아시아 무역체제에 미치는 효과는 중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 무역체제의 틀을 형성하거나 변경하는 문제와 불가피하게 연결된다. 중요한 제도의 변화나 정체성의 변화가 흔히 심각한 위기를 거치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현재의 글로벌 위기는 동아시아 무역체제와 제도의 변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는 없을까? 1997/1998년 동아시아 위기와 비교할 때, 현재의 위기상황은 동아시아의 지역적 독자성과 통합성을 높일 수 있는 물질

적, 이념적, 제도적 근거를 대단히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행과정과 이후 회복과정에서 동아시아의 (무역)지역주의를 적극적으로 주창하거나 옹호하는 강력한 흐름은 찾아보기 어렵다. 왜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East Asian Free Trade Area, 이하 EAFTA)와 같은 높은 수준의 제도화를 위한 시도는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별다른 동력과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인가? 또한 위기의 심화와 회복과정에서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지역의 위상과 중요성이 현저하게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동아시아 무역체제의 안정적 제도화의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것인가?

2. 위기의 원인과 동아시아: 글로벌 불균형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동아시아 무역의 흐름과 체제에 미치는 효과를 다루는 본 연구의 초점 상, 위기의 원인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여기서 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글의 논지에 맞추어, 위기의 근본원인으로 지목되는 글로벌 불균형의 한 축을 이루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무역흑자 그리고 과잉흑자를 가능하게 하는 국가개입을 통한 인위적 환율저평가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볼 것이다. 실제로 내인론 vs. 외인론, 혹은 구조론 vs. 행위자론 등으로 대별되는 위기의 근본적 혹은 직접적 원인에 대한 논쟁은 별반 생산적인 논쟁으로 보이지 않는다. 논쟁의 이면에는 국내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는 책임소재를 둘러싼 희생양 찾기 그리고 위기수습을 위한 조정비용을 누가 더 많이 부담해야 하는가를 둘러싼 정치공방이 자리한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미시적인 차원에서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정부의 감독실패 그리고 거시적 차원에서 글로벌 불균형과 이를 뒷받침하는 세계무역 및 금융체제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²⁾ 즉, 미국에서의 소비과잉/저축부족과 중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의 저축과잉/소비부족은 동전의 앞뒷면 관계이며, 양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국가의 통제를 벗어난 외환시장의 팽창 그리고 세계적으로 연결되고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세계경제의 금융화(financialization)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여기서 위기의 원인이 중국의 무역흑자/과잉저축 때문인지 미국의 무역적자/과잉소비 때문인지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경상수지 흑자문제는 비단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공통된 문제이다. 일본, 한국 그리고 ASEAN 국가들 역시 2000년대 이후 대부분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해왔으며 이를 통해 막대한 양의 외환보유액(주로 달러)을 비축하는 데 집착해왔다. 이러한 행태는 1997년 동아시아 국가들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외환위기의 학습효과로서, 자국의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이 거대외국자본의 급속한 유출입에 의해 요동치고 붕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자구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³⁾

2) Roger C. Altman, "The Great Crash, 2008", *Foreign Affairs*, Vol. 88, No. 1 (2009), pp. 3-4; 정구연 외, 『세계경제대토론: 금융위기 이후를 논하다』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10); 정진영, 「케인스, 국제통화체제, 세계금융위기: 케인스의 복수와 귀환?」, 『국제정치논총』 Vol. 49, No. 5 (2009); 정진영, 「동아시아의 복수, 경제체제 간 마찰 그리고 세계경제의 불균형: 누가 조정의 부담을 안을 것인가?」, 『한국정치학회보』 제44집 1호 (2010)을 참조할 것. 외인론의 대표적 견해로는 Bernanke, B. S. "Monetary Policy and the Housing Bubble."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Atlanta (2010); Martin Wolf, *Fixing Global Finance*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2008); Niall Ferguson, and M. Schularick, "Chimerica and the Global Asset Market Boom", *International Finance*, Vol. 10, No. 3 (2011) 등을 참조할 것. 반대의 견해로는 Zhou, X. "On Savings Ratio." (<http://www.pbc.gov.cn/english/detail.asp?col=6500&ID=179>, 2009); 이왕휘, 「G20 서울 정상회담 이후 G2 경제 갈등: 한국에 주는 함의」, 외교안보연구원-아주대 공동 학술 세미나: G20 서울 정상회의 이후 동북아 정세의 변화 발표논문 (2010)를 참조할 것.

3) 이런 의미에서 정진영(2010)은 현재의 위기를 '동아시아의 복수'라고 부른다.

위기의 책임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공방에서 확인된 것은 역설적이게도, 1985년 플라자(Plaza) 합의에서 미국이 일본이나 독일을 다루던 방식으로 중국을 손쉽게 압박할 수는 없다는 사실 그리고 위기해결의 과정에서 더 이상 일방적인 주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2010년 한국에서 개최된 G-20이 "미국패권 쇠퇴의 상징적 장"⁴⁾이라 지칭되듯, 위기의 해법을 마련하고 정책 공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미국은 중국의 동의, 여타 선진국과 주요 신흥개도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절감하게 되었다. 어떤 국가나 지역도 중단기적으로 미국을 대체할 수는 없다. 하지만 미국 역시 세계질서의 관리자로서 과거와 같은 독보적이고 압도적인 지위를 누릴 수 없음도 자명해졌다.

위기의 책임소제와 관련되어 현재 미국 등이 중요하게 제기하는 이슈는, 중국 및 일부 동아시아 국가들이 (한국도 여기에 포함된다)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자국 화폐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린다는 비난이다. 퍼거슨과 슐라릭(Ferguson and Schularick)은 특정 국가가 자국의 화폐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춤으로써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무역수지흑자를 상당기간 유지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⁵⁾ 그들은 또한 자신들이 개발한 적정 환율 계산법을 이용하여 양국의 노동생산성 격차를 통제하더라도 중국의 위안화는 달러에 비해 약 30%-48% 저평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 의회는 상·하원 합동으로 환율조작과 관련한 제재법안(Currency Reform for Fair Trade Act of 2009)을 상정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환율조작을 불공정 무역행위(unfair trade practice)인 보조금지급이나

4) 손열·조홍식, 「G20 서울회의가 남긴 것」, 『EAI 논평』 제14호 (2010).

5) Ferguson and Schularick(2011), pp. 215-239. 또한 다음을 참조할 것. Barry Eichengreen, *Global Imbalances and the Lessons of Bretton Woods* (Cambridge: The MIT Press, 2010).

덤핑과 동일한 것으로 규정하고 상계관세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⁶⁾ 반면 바그와티(Bhagwati)는 미국의 이러한 시도가 과거 일본에게 했던 비난(Japan bashing)을 중국의 환율정책을 대상으로 반복하는 것(China exchange rate bashing)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중국의 고정환율제는 현재의 국제외환질서에서 부당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과연 어느 정도가 적정 환율인지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매우 상이한 의견(40% 절상부터 20% 절하에 이르기까지)을 제시하고 있다고 한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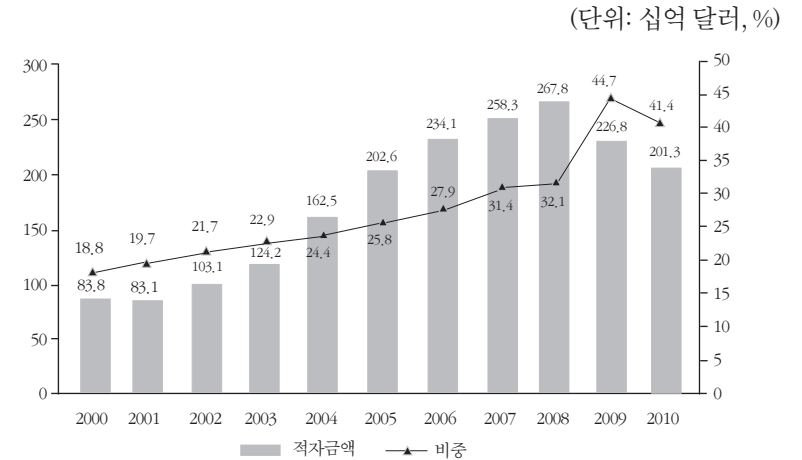
불균형의 책임소재에는 이견이 있지만 그것이 비정상적이며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큰 이견이 없는 듯하다. 현재와 같은 미국의 경상수지적자와 중국의 흑자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불균형을 바로 잡거나 축소할 방법은 무엇인가? 위기의 발발 이후 미국의 적자 축소와 중국의 흑자 축소는 시장메커니즘을 통해서 불균형의 회복이 어느 정도는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수출은 글로벌 위기 동안 주요 수출대상국인 선진국의 경기위축과 수요 감소로 크게 줄어들었으며, 2008년 미국의 전체 무역적자 규모 역시 8,347억 달러에서 2009년 5,069억 달러로 감소했다. 하지만 대중 무역적자가 미국의 전체 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32.1%에서 44.7%로 증가하여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그림 1〉 참고). 결국 이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위안화 절상압력 및 양국 간 통상분쟁을 격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2010년 들어 양국 간 무역적자 비중은 다소 진정되는 국면을

6) 이장규 외,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미·중 경제관계』(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p. 85.

7) Jagdish Bhagwati, "The Lithium President: fight protectionism with more passion", in Richard Baldwin and Simon Evenett, eds., *The collapse of global trade, murky protectionism, and the crisis: Recommendations for the G20* (A VoxEU.org publication, 2009).

보이고 있다. 2010년 3분기까지 나타난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비중은 41.4%로 소폭 감소되었다.⁸⁾

〈그림 1〉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추이



주: 1) 2010년 수치는 3분기까지 누적수치이다.
 2) 비중은 전체 적자 중 대중국 무역적자 비중임.
 자료: 미 상무부(2010. 12), 경제분석국(BEA).
 (이장규 외 2010에서 재인용)

미국은 경기부양과 유동성 과잉공급을 일정기간 유지함으로써 달러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고 대외채무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10년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미국이 제안한 바 있는 경상수지 관리 목표제(경상수지 흑자 규모를 GDP의 4% 이내에서 양적으로 관리하는 것) 등 보다 가시적인 방법을 도입하여 직접 관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⁹⁾ 이러한 미국의 정책기조에 대해 유럽의 일부와 중

8) 이장규 외(2010), pp. 66-67.

9)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미국이 이 안을 제시했으나 중국은 물론 흑자국인 독일, 일본 등의 반대로 공식화되지는 못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국으로부터 일정한 반발과 불만이 제기될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이 미국채 투매나 달러 투매, 달러가치 폭락과 같은 폭력적이고 파국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미국과 중국, 유로존을 비롯한 어느 국가도 이러한 해결을 통해 이익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글로벌 불균형은 위기 이전과 같은 심각한 수준까지 악화되지는 않되 적자국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¹⁰⁾ 이를 위한 국제적 공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수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화폐가치 하락을 추구해 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비축하고 있고 내부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받고 있는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이러한 정책수단을 남용하는 것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정책은 국가 간 통상마찰과 갈등을 악화시킬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도 억제될 필요가 있다.

3. 위기의 경과와 동아시아: 위기극복의 견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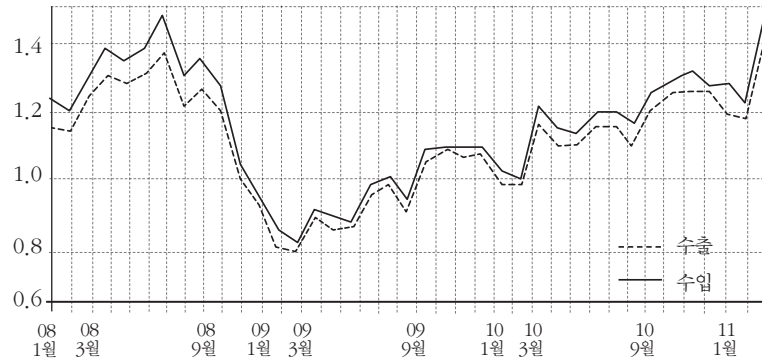
글로벌 금융위기가 동아시아 무역의 흐름과 추세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이 단락에서는 위기 이전과 이후의 경제지표들을 기초로, 여타 지역과의 비교를 통해 동아시아 무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위기 전후의 두드러진 변화가 무엇인지 검토해볼 것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1) 동아시아 지역이 이번

10) 박현수 외, 「위기 이후 세계 경제질서의 변화와 대응」, 연구보고서 (2011.3.31),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11), pp. 11-12.

금융위기의 영향, 실물경제와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상대적으로 가장 덜 받았으며 회복도 가장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2) 이러한 신속한 회복은 무엇보다도 중국의 빠른 경제회복과 내수확대에서 기인한다는 것, (3) 글로벌 위기를 거치면서 동아시아국가들의 대중국 의존도(수출/수입 의존도 및 성장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 (한국의 경우 특히 그러하다) 그리고 (4) 동일한 원인에 의해, 타 지역에 비해 동아시아 지역의 역내무역이 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글로벌 위기의 진행 및 동아시아 지역에서 위기의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의 <그림 2>는 세계교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70개 국가들의 2008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월별 상품 수출/수입의 변동을 보여준다. 2008년 8월 위기의 시작부터 2009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세계교역은 금액 기준 45%까지 급격하게 축소되었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회복되었으며, 2011년 1/4분기에는 위기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음을 알 수 있다. 위기의 진행과 회복에 있어 이전의 위기와 차별화되는 특징은, 위기가 매우 급속하고 심각하고 동조화된 방식으로(sudden, severe, and synchronized) 이루어졌으며 금융부문에서 발생한 위기가 실물경제와 무역부문까지 급속하게 전파되어 심각한 위축을 가져왔다는 사실이다.

〈그림 2〉 월별 상품 수출/수입 2008-2011, 70개국 합산, 단위: 조 달러
 (수입은 운임보험료포함가격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included),
 수출은 본선인도가격 fob(free on board))



출처: WTO 보도자료 2011.4.7.

금융위기의 발생 후 교역이 급격하게 위축되는 직접적 원인은 무역금융(trade credit)의 붕괴, 금융기관의 부실화에 따른 신용경색과 금융중개기능 마비, 무역여신조건의 엄격화에 따른 금융비용의 증가에서 찾을 수 있다. 금융위기가 무역축소로 전파되는 메커니즘에 대한 기존의 설명방식인 소득경로(income channel)로는, 위기의 전개와 심화과정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즉, 수입국의 금융위기 → 수입국의 경기침체와 소득하락 → 수입국의 수입축소 → 수출국의 수출축소 → 전 세계적 교역 위축과 경기침체라는 기존의 경로로는 현재 위기 전개의 격렬함과 급속함을 포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Yi)는 생산의 수직적 분업(vertical specialization of production chain) 하에서 발생하는 무역흐름(trade flow)의 단절로 현재 위기진행/회복의 신속성, 심각성, 동조성을 더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¹¹⁾ 일국(예를 들어, 미

11) Kei-Mu Yi, "9. The collapse of global trade: the role of vertical specialisation", in Richard

국)의 금융위기가 그 국가에서 생산·소비되는 완제품(예를 들어, PC)의 수요를 감소시키고, 그 제품의 중간재나 부품을 공급하는 국가(예를 들어, 멕시코)로부터의 수출을 감소시킨다. 한편 중간재 수출국(멕시코)은 동시에 수입국(미국)으로부터 원천기술과 부품(반도체 칩과 부품 등)을 수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일국(미국)의 금융위기는 그 국가와 생산네트워크를 공유하는 일군의 국가들에게 직접적인 과급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이 경우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급격하게 위축되는 것이다.¹²⁾

세계교역이 급격하게 위축되었다 회복되는 부침 속에서 각 지역은 상이한 영향을 받았다. 특히 동아시아는 위축의 영향을 가장 덜 받았음과 동시에 회복은 가장 빠르게 이루어지는 지역이다. 아래의 〈표 1〉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각 지역별 GDP, 수출/수입의 증감 추이를 보여준다. 위기의 진원지인 미국은 2009년 GDP 2.6% 감소에서 2010년 2.8% 증가로 바로 회복된 반면, 유럽연합 27개국은 2009년 4.2% 감소에서 2010년 1.9% 증가로 미국보다 지체된 양상을 보인다. 아시아 국가들(여기에는 인도가 포함되어 있다)은 2009년 GDP 0.2% 감소로 위기자체의 영향도 가장 작았던 반면 2010년 6.3% 성장으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Baldwin and Simon Evenett, eds., *The collapse of global trade, murky protectionism, and the crisis: Recommendations for the G20* (A VoxEU.org publication, 2009). 이 설명방식은 아직 더 많은 경험적 연구를 필요로 한다. 수직적 생산네트워크가 고도로 발달한 동아시아지역에 이 설명의 적실성은 더욱 높은 것으로 기대된다.

12) 이러한 설명으로부터 얻게 되는 함의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생산체계의 수직적 분업구조에 편입된 국가들은 경제위기 시 관세인상 등의 보호주의정책을 사용할 유인이 작다는 것이다. 둘째, 위기 시 생산체인의 단절로 교역축소가 동시적이고 급속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회복 역시 생산체인을 중심으로 동시적이고 급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위기회복 양상은 이러한 설명과 잘 부합하는 면을 보여준다.

〈표 1〉 2007-2010 지역별 GDP와 상품교역(연간 증가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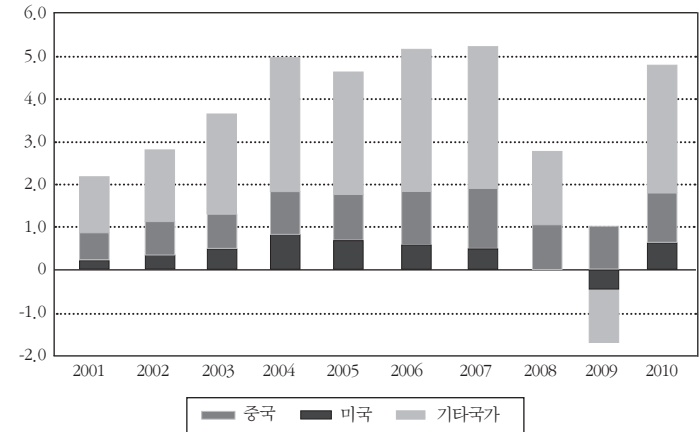
	GDP			수출			수입		
	2008	2009	2010	2008	2009	2010	2008	2009	2010
전체	1.4	-2.4	3.6	2.2	-12.0	14.5	2.2	-12.8	13.5
북미	0.1	-2.8	3.0	2.1	-14.8	15.0	-2.4	-16.7	15.7
미국	0.0	-2.6	2.8	5.8	-14.0	15.4	-3.7	-16.4	14.8
유럽	0.5	-4.0	1.9	0.2	-14.1	10.8	-0.6	-14.2	9.4
유럽연합(27)	0.5	-4.2	1.8	0.0	-14.5	11.4	-0.9	-14.2	9.2
아시아	2.8	-0.2	6.3	5.5	-11.2	23.1	4.7	-7.5	17.6
중국	9.6	9.1	10.3	8.5	-10.5	28.4	3.8	2.9	22.1
일본	-1.2	-6.3	3.9	2.2	-24.8	27.5	-1.0	-12.2	10.0
인도	6.4	5.7	9.7	14.4	-6.8	19.9	17.3	-1.0	11.2
신흥공업국(4)-a	1.9	-0.8	7.7	4.9	-5.7	21.3	3.5	-11.4	18.0

a - Hong Kong, China; Republic of Korea; Singapore and Chinese Taipei.
출처: WTO Secretariat.

여기서 특히 주목할 것은 위기 이전 세계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던 동아시아지역이 위기 이후 세계경제 회복에 있어서도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과 인도의 10% 성장, 신흥 4개국(East Asian Tigers)의 7.7% 성장은 동아시아 지역 뿐 아니라 세계경제 전체의 빠른 회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특히 중국은 위기가 심화되는 2008년과 2009년에도 9% 이상의 성장세를 유지함으로써 성장의 버팀목 구실을 했다. 전 세계에서 수입이 급격한 감소를 기록했던 2009년에도 중국만은 유일하게 2.9%의 증가를 보였다. 위기 대응책으로 중국이 마련한 내수확대를 위한 여러 조치를, 예를 들어 2008년 10개항 경기부양조치, 9대 금융조치, 감세 및 농촌 소비보조금 등

이 상당한 효과를 발휘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¹³⁾ 선진국 경제의 극심한 부진 속에 중국경제의 상대적 호조가 두드러지면서 세계 경기회복에서 중국의 기여도 그리고 주요 수출국의 대중국 수출의존도도 크게 상승하게 되었다. 아래의 그림은 세계 경제성장에서 중국의 기여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서, 위기의 정점인 2009년 성장과 경기회복의 유일한 보루로서 중국만이 긍정적 기여를 했다는 사실 그리고 위기 이후 제1의 성장기여국으로서 중국의 위치가 더욱 공고해졌음을 보여준다.

〈그림 3〉 세계경제 성장에서 중국의 기여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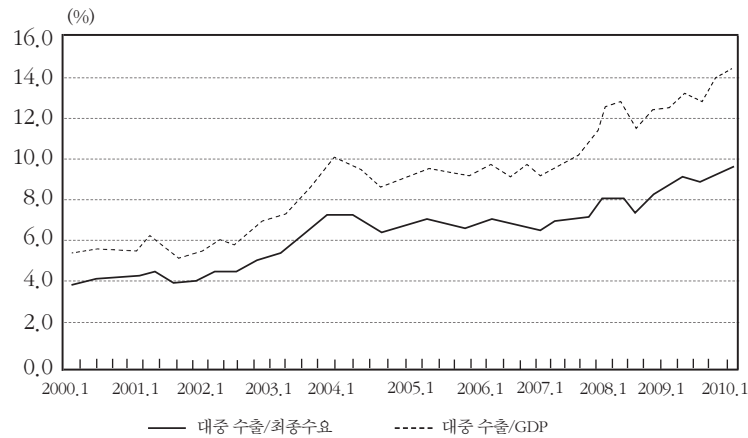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로부터 계산.
주: 2010년은 전망치
(강두용 외[2010], p. 2.에서 재인용)

앞서 논의의 당연한 귀결로서, 글로벌 위기를 거치면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중국 의존도(수출/수입 의존도 및 성장의존도) 역시 심화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한국의 경우 특히 두드러지는데, 한국이 이번 위기로부터 신속하

13) 자세한 정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장규 외(2010) 2장을 참조할 것.

게 회복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대중국 수출호조였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내구재, 부품소재 수출은 중국 경기부양책의 직접적인 수혜를 입었으며 중국수출의 회복과 함께 급속한 회복세를 보였다. 대중국 수출이 한국의 최종수요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007년 4분기 7.0%, 9.9%에서 2010년 2분기에는 9.6%, 14.3%로 상승하였는데, 2008년 글로벌 위기가 이러한 비증확대의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그림 4〉 참조). 2010년 상반기 기준 대중국 교역이 한국의 성장에 기여하는 비율은 약 54%에 이르고, 대중 수출이 우리나라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위기 이전 27% 내외에서 2010년 상반기에는 30.7%로 상승하였다. 우리의 대중국 수출비중은 선진국 전체에 대한 수출비중보다 높으며, 제2의 시장인 미국에 비해서도 약 세 배에 이를 만큼 압도적으로 높다.¹⁴⁾

〈그림 4〉 한국의 GDP와 최종수요에서 대중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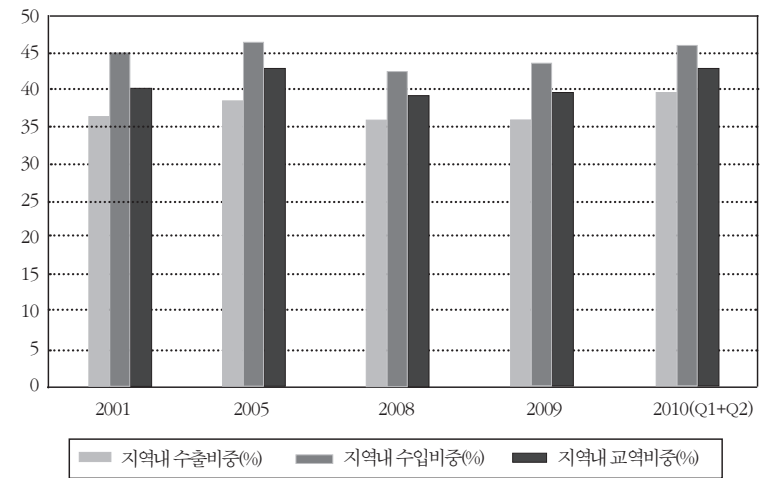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및 무역협회 자료로부터 산업연구원 추정.
주: 경상 기준.

(강두용 외 2010에서 재인용)

14) 강두용 외, 「금융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중국 의존도 추이와 시사점」, e-KiET 산업경제정보, 제491호 (2010). 이처럼 높은 대중 의존도에 따른 위험과 도전 역시 중요한 문제로서 대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위기 이후 동아시아 지역의 역내무역 심화현상에 대해 살펴보자. 위기 이후 세계경제 회복에서 중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전 세계 수출국들의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음은 앞에서 살펴보았다.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긴밀하게 연계된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역내무역이 증가하고 상호의존이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 하겠다. 즉, 중국을 허브로 하고 인접한 ASEAN과 한국, 대만 등이 주변을 이루는 허브-빗살 (hub and spoke) 체제가 형성되는 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아래 〈그림 5〉에서 ASEAN+3의 역내무역은 2005년 42.5%를 정점으로 이후 4년간 지속적으로 낮아졌다가 위기가 심화되는 2009년 1분기에 역전되기 시작한다.

〈그림 5〉 ASEAN+3의 역내무역 비중



출처: IMF, Direction of Trade, various issues
(Park[2011], p. 9. 재인용)

2010년 2분기에 이르면 역내무역 비중은 2005년 수준까지 회복되는데, 이

는 여타 동아시아 국가들의 수출 증가를 중국이 흡수함으로써 가능해진 것이다. 즉, 중국에서의 수요증가와 수입증가가 동아시아 국가들의 신속한 위기극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¹⁵⁾

동아시아 역내무역을 여타 지역과 비교하기 위한 자료는 아직 2010년 말까지의 것을 확보하지 못하여 여기서는 2009년 말까지의 자료만을 이용하겠다. 아래의 <표 2>는 북미, 유럽의 역내교역 비중이 2000년에서 2009년까지 축소되거나 정체상태임에 반해, 아시아지역은 49%에서 52%로 상승했음을 보여준다. 2009년 위기의 와중에 모든 지역의 역내무역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 감소율에 있어 아시아지역은 북미의 24%, 유럽의 23% 감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16%의 감소만을 보였다. 이는 위기의 진행과 심화, 회복 과정에서 동아시아지역이 여타 지역에 비해 가장 견고한 역내무역의 흐름을 유지해 왔음을 의미한다.

<표 2> 지역별 역내무역 비중과 변화(2008-2009)

	북미 수출				유럽 수출				아시아 수출			
	비중 (%)		연간변화율(%)		비중 (%)		연간변화율(%)		비중 (%)		연간변화율(%)	
	2000	2009	2008	2009	2000	2009	2008	2009	2000	2009	2008	2009
북미 수입	56	48	7	-24	10	7	4	-23	26	18	3	-19
아시아 수입	19	20	9	-14	8	8	13	-13	49	52	16	-16
유럽 수입	17	18	13	-21	73	72	10	-23	17	18	12	-20

출처: WTO, 2010 10월 보도자료.

15) Yung Chul Park, "The Global Financial Crisis: Decoupling of East Asia-Myth or Reality?" ADBI Working Paper, No. 289. (Tokyo: Asian Development Bank Institute, 2011), pp. 9-10.

한편, 아래의 <표 3>은 부품, 중간재, 완제품에 이르는 생산네트워크가 잘 발달된 부문인 자동차업종을 대상으로 지역별 역내/역외 무역의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두 번째 행은 전체 수출에서 역내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미국과 유럽의 높은 비중(70% 이상)에 비해 아시아지역은 아직 30% 정도의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3> 주요 수출지역별 자동차 제품 수출(2008-2010) (단위 10억\$, %)

	세계 수출액 (단위10억\$)	세계 수출에서 역내무역이 차지하는 비중 (%)				연간 세계수출 증감률 (%)		연간 역내수출 증감률 (%)		연간 역외수출 증감률 (%)	
	2010	2008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2009	2010	
북미											
자동차 제품	205.3	72.2	75.6	76.3	-32	43	-28	45	-40	39	
완제품	132.4	66.4	70.7	71.2	-33	45	-29	46	-42	42	
부품	73.0	83.1	84.4	85.5	-29	41	-28	43	-34	31	
유럽											
자동차 제품	538.8	75.2	77.1	71.6	-31	18	-29	10	-36	46	
완제품	351.1	73.5	76.5	70.5	-32	16	-29	7	-39	46	
부품	187.8	78.6	78.3	73.8	-29	22	-29	15	-28	47	
아시아											
자동차 제품	276.5	24.5	31.8	32.5	-34	45	-14	48	-40	43	
완제품	170.7	17.6	24.0	25.7	-41	45	-19	55	-45	42	
부품	105.8	39.5	44.2	43.4	-19	44	-10	42	-26	46	

출처: WTO Secretariat (2011.04.11).

그러나 유럽의 감소(75.2%에서 71.6%)에 비해 북미(72.2%에서 76.3%)와 아시아(24.5%에서 32.5%)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의 증가추세는 두드러진다. 또한 역내수출의 연간 변화를 비교하는 네 번째 행에서,

북미와 유럽에서는 글로벌 위기의 여파로 2009년 역내수출이 급격하게 감소한 반면(북미 -28%, 유럽 -29%), 아시아 지역에서의 감소는 상대적으로 작았음(-14%)을 알 수 있다.

4. 위기의 파급효과와 동아시아: 은밀한 보호주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동아시아 국가들의 무역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 가운데 특히 주목할 것이 위기의 대응으로 각국이 사용하는 보호주의의 강화 경향이다. 위기가 촉발되었던 2008년 보다 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된 2009년 하반기 이후 오히려 여러 형태의 보호주의가 부상하고 이를 둘러싼 무역마찰이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위기의 한복판에서 각 국가들이 긴급하게 사용했던 여러 정책들은, 불안정하고 긴박한 상황을 이유로 여타 국가들의 관용을 기대할 수 있었다. 다른 국가들도 같은 이유로 유사한 정책들을 사용했음은 물론이다. 즉, 위기의 정점에서 타국가의 개별정책에 대해 그것이 다자통상규범(WTO)이나 지역통상규범(FTA)에 부합하는지를 엄격하게 따지고 시비를 걸 여유가 서로에게 없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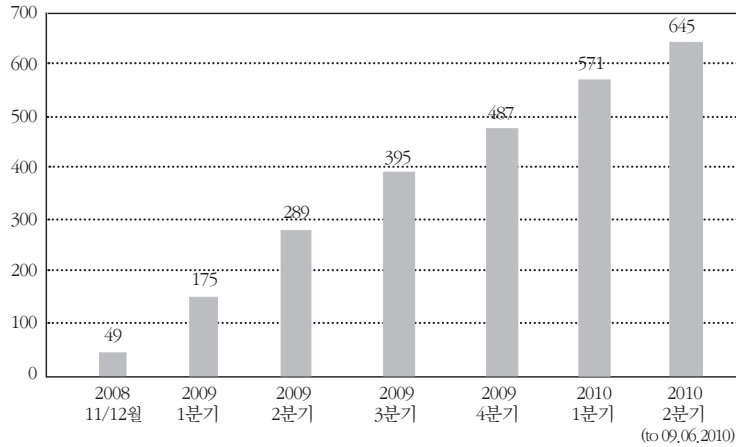
보다 중요하게는, 2009년 이후 정부지출확대와 유동성 공급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의 약효가 떨어지고 부작용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각 국가들이 자국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수단으로 보호주의적 정책을 사용하여 수출촉진과 수입억제를 시도할 유인이 크다는 것이다. 대다수 국가들은 재정지출 축소, 이자율 상승, 지급준비율 상승과 같은 출구전략(exit strategy)을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곧 실시할 수밖에 없다. 긴축정책에 따른 경기침체와 비용증가, 실

업률 상승 등 악화된 경제여건 하에서, 사적 행위자들은 여러 형태의 보호주의 정책을 요구하게 된다. 국내시장에서의 경쟁력 유지와 기업/산업의 생존을 위해 관세인상(실행관세에서 양허관세로의 전환)이나 비관세장벽(반덤핑, 상계관세 부과 등)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또는 국내보조금 지급과 세제혜택을 요구할 수도 있다(예를 들어, 미국의 Buy America 등). 또는 수출보조금이나 세제/금융혜택을 이용한 수출확대를 통해 경제성장을 달성하려는 유인도 국가와 기업 모두에서 강화된다(중국의 수출세 감축이나 수출환급을 인상 등). 환율조작으로 수출경쟁력을 인위적으로 창출하려는 시도도 생겨날 수 있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촉발된 2008년 하반기부터 주요 국가들은, 1930년대의 역사적 교훈을 상기하면서 보호주의와 무역마찰을 제어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러한 노력의 가시적 결과가 2009년 피츠버그 G20 회의에서 정상들이 자유무역의 현상유지(standstill)와 신규 도입된 보호주의 정책의 철회(rollback)를 선언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약속은 실질적으로 잘 준수되어 왔는가? 전반적인 평가에 있어 이 약속은 큰 실효성을 지니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브넛(Evenett)과 그의 동료들은 2008년 제1차 G20 정상회의 후 보호주의가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아래 <그림 6>).¹⁶⁾

16) Simon J. Evenett, "2. Did G20 Members Hold the Line Against Beggar-thy-Neighbor Policies after the Pittsburgh Summit? The Record Since September 2009", in Simon J. Evenett ed., *Unequal Compliance: The 6th GTA report* (London: Centre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2010)

〈그림 6〉 2008년 1차 G20 정상회의 후 무역유해조치 (누적 수)



출처: Evenett (2010).

이브넛과 프리츠(Evenett and Fritz)는 외국의 상업적 이익에 대해 ‘거의 확실한’ 차별적 효과를 지닌 조치, G20 국가들 중 15개국 이상을 대상으로 무역 제한/왜곡 효과를 발휘하는 조치, 효과가 US \$100억 이상 미치는 조치 등을 ‘점보 차별조치(jumbo discriminatory measures)’로 규정하고 이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각각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¹⁷⁾ 비록 경제위기 초기에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인 보호주의 폭증과 무역전쟁 발발은 아니라 하더라도, 점보 차별조치의 증가에서 알 수 있듯이 보호주의정책들은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들의 조언은 정책결정자들이 단순히 보호주의의 유희를 물리치는

17) 이러한 조치의 예로서, China: Export tax rebates, USA: Buy American provisions in stimulus package, China: Implementation of State Council Opinions on imported goods, China: Adjustment of tariff policy on key technical equipment, Japan: State endorsement of private initiative to raise food self-sufficiency, Indonesia, Malaysia, and Thailand: Limiting rubber exports to 915,000 tons during 2009 등을 들 수 있다.

것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미 실행된 차별적 조치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객관적이고 신속한 정보제공, 효율적인 감시, 여타 국가 및 사적 집단으로부터의 압력, 공개적인 경고를 강화해야 한다.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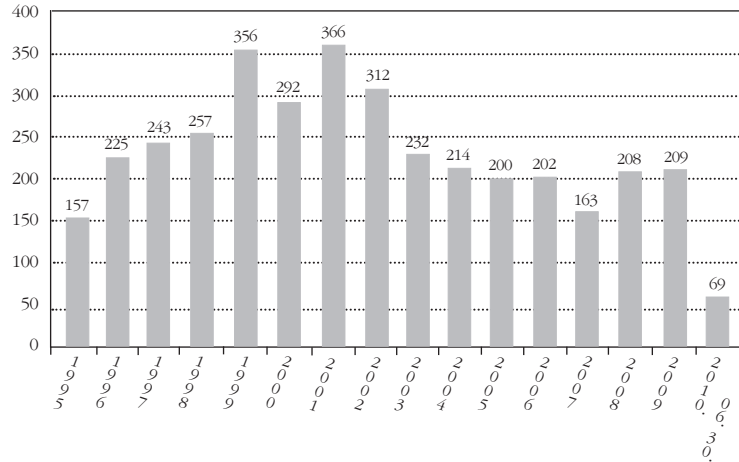
한편, 반덤핑조치(anti-dumping measures: 이하 AD), 보조금/상계관세조치(subsidy/countervailing measures: 이하 SCV),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등 무역관련 규율(trade-related rules) 역시 ‘은밀한 보호주의’의 한 유형이라 할 수 있는데, 세계무역기구(WTO) 등장 후 이미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¹⁹⁾ 만일 금융위기 이후 국가들의 보호주의가 강화되고 이로 인한 무역마찰이 늘어한다면 아마도 덤핑/반덤핑조치 그리고 보조금/상계관세조치의 남용과 그 보복이란 방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아래 〈그림 7과 8〉의 반덤핑 조사 개시(investigation initiation) 및 최종 실행(final measures) 숫자에서 알 수 있듯이, 글로벌 위기 이후 반덤핑조치의 사용 및 이를 둘러싼 국가 간 무역마찰이 현저하게 증가했다고는 볼 수 없다. 2010년 상반기 반덤핑조사와 실행은 2009년 상반기에 비해 오히려 약 29% 줄었다. 이 시기 가장 많이 반덤핑조사를 개시한 국가는 인도(17개의 신규 조사), EU(8개), 아르헨티나(7개), 브라질(5개)인 반면, 조사대상이 된 국가들은 중국(23개), EU(11개), 미국(5개), 한국, 태국(4개) 등이다(WTO 2010. Press/623). 우리의 주된 관심사인 전 세계적 보호주의에 의한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피해 혹은 그 대응과 관련해서 두드러진 지역적 특수성이나 예외성을 찾기는 어렵다. 단 세계의 공장이며 압도적인

18) Simon J. Evenett and Johannes Fritz, “4. 'Jumbo' discriminatory Measures and the Trade Coverage of Crisis-Era Protectionism”, in Simon J. Evenett ed., *Unequal Compliance: The 6th GTA report* (London: Centre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2010), p. 9.

19) 이에 대한 일반적 연구로는 문돈, 「국제무역체제의 탄력장치: GATT체제에서 WTO체제로의 이행과 이후 변화에 대한 연구」, 『국가전략』, 제11권, 2호 (2005)을 참조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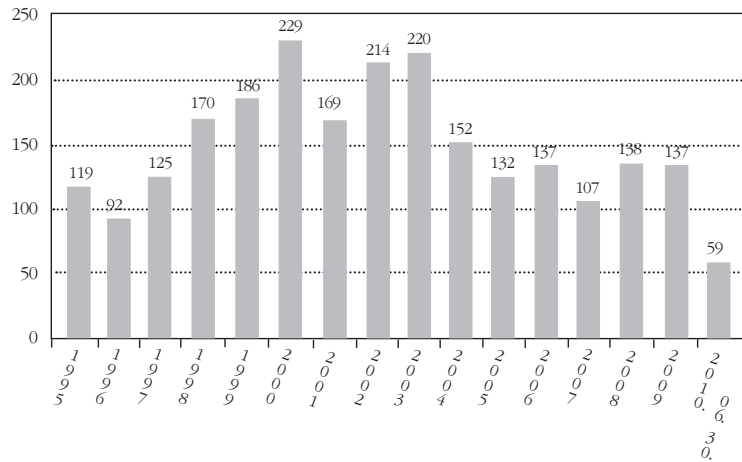
1등 수출국인 중국은 지속적으로 가장 빈번한 반덤핑조치의 타깃이 되어왔으며, 위기 이전과 이후 이러한 패턴은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7〉 반덤핑 (AD) 조사 개시 숫자(1995-2010.6.30.)



출처: WTO date http://www.wto.org/english/tratop_e/adp_e/adp_e.htm.

〈그림 8〉 반덤핑 (AD) 조치 최종 실행 숫자(1995-2010.6.30.)



출처: WTO date http://www.wto.org/english/tratop_e/adp_e/adp_e.htm.

한편, 2008년 경제위기 이후 미-중 양국 간 무역규율과 관련한 통상분쟁이 증가하고 갈등이 고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아래의 〈표 4와 5〉는 이를 정리한 것이다. 미국의 대중국 반덤핑, 상계관세조치는 2004년 후 감소하는 추세였다가 2007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이에 대한 보복의 성격으로 중국 역시 2008년과 2009년 대미 조사와 실행을 크게 강화했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요하는 것이 보조금/상계관세조치(SCV)와 관련된 분쟁이다. 그 이유는 경제위기 시 각 국가들이 동원하는 여러 국내 산업정책이나 구조조정 정책(부실기업에 대한 지원과 회생, 금융기관을 통한 구제조치) 등이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규정되어 상대국의 상계관세 관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2008년 5건 (전체 미국의 조사 6건 중) 2009년 10건의 SCV 조사를 실시했으며, 대부분 상계관세를 실제로 부과했다. 한편 이에 대응하여 중국 역시 2009년 최초로 미국에 대한 SCV 위반 조사를 3건 개시하였다.

〈표 4〉 미국의 대중국 반덤핑조치 및 보조금/상계관세조치 추이 (단위: 건)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전체 AD, SCV 조사	95	39	42	29	14	11	35	22	34
대미 AD, SCV 조사	8	9	9	6	3	4	18	14	22
대미 AD, SCV 발동	5	3	8	5	5	2	2	17	15

자료: 미 상무부 국제무역행정청(ITA); WTO.
(이장규 외 2010에서 변경하여 재인용)

〈표 5〉 중국의 대미국 반덤핑조치 및 보조금/상계관세조치 추이 (단위: 건)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전체 AD, SCV 조사	14	30	22	27	24	10	4	14	20
대미 AD, SCV 조사	-	3	3	3	3	1	0	5	11
대미 AD, SCV 발동	-	1	2	3	5	6	1	-	5

자료: 미 상무부 국제무역행정청 (ITA); WTO.
(이장규 외 2010에서 변경하여 재인용)

2009년 9월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조치 발동을 기점으로 점화된 양국 간의 분쟁은 약 1년 간 중국산 철강, 광택지, 강관, 파이프, 알루미늄 등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보조금/상계관세 조사 및 발동으로 이어졌으며, 미국산 닭고기, 아디프산, 승용차, 전기강관, 팜섬유, 나일론제품 등에 대한 중국의 조치로 확대되었다(이장규 외 2010, 3장). 반덤핑/보조금 전쟁이 1930년대의 관세전쟁을 대신하고 있다는 표현(Crean 2009)에 어울릴 만큼, 양국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²⁰⁾ 중국에 대한 보조금/상계관세 제소는 적용대상이 포괄적이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폭발성이 높은 이슈이다.²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의 두 거인인 G-2 사이의 무역분쟁이 무역전쟁의 전조로서 여타 국가들에게 큰 우려를 일으키지 않았던 것은 다음의 이유 때문이다. 먼저 양국이 무역질서를 안정화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공동의 이해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2009년과 2010년 정례화 된 미·중 전략

20) Simon Crean, "1. Protectionism and the global economic crisis - the role of trade in the response", in Richard Baldwin and Simon Evenett, eds. *ibid.* (2009)

21) 중국의 사회주의 경제시스템의 특성 상, 금융, 토지, 세제, 임금 등 생산과 관련된 모든 요소들의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의해 통제되거나 정부정책에 의해 강한 영향을 받는다. 즉, 기업의 경영환경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들이 모두 정부의 보조금과 관련된 것으로 간주되어 타국이 문제제기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및 경제대화(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에서 확인되었다. 양자적 틀을 통해 양국은 동반자로서 서로의 위상을 인정하고 포괄적 협력을 모색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과시했던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정치적으로 과열되고 민감해질 가능성이 높은 통상분쟁을 냉각·중재하고 탈정치화하는 틀인 다자분쟁해결제도, WTO 분쟁해결제도가 여전히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²²⁾ 실제로 분쟁 격화의 시발점이 되었던 “중국산 타이어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조치”는 중국이 미국을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WT/DS 399) 하면서 정치성이 일정 정도 약화된 법적 대결 형태로 전환될 수 있었다.²³⁾ 중립적인 국제기구와 제3자에 의해 내려지는 분쟁판정은 패소국의 승복을 촉진할 수 있다. 양자분쟁에서 굴복하는 경우에 비해 다자분쟁에서 패소판결을 받는 것이, 국내의 비난과 공격으로부터 정책결정자들을 어느 정도는 자유롭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점보차별조치나 무역규율조치 등을 이용하여 자유무역을 제한하거나 왜곡하는 보호주의는 특히 경제위기나 침체의 시기에 등장하여 손쉽게 국민적 지지와 공감을 획득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무역체제를 이끄는 주요 국가들의 공동의 노력과 협력 없이 보호주의 압력을 이겨나가는 쉽지 않다.²⁴⁾ 글로벌 위기에도 불구하고 보호주의에 저항하여 자유무

22) 송원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보호무역 추세와 대응방안』,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2009).

23) 최근에 내려진 세계무역기구(WTO) 패널판정은 미국의 세이프가드조치가 절차적으로 정당한 것이었다고 판정함으로써 미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대해서는 http://www.wto.org/english/tratop_e/dispu_e/cases_e/ds399_e.htm 참조.

24) 이에 대해 바그와티(2009)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두 가지 중대한 도전, Buy America 조항과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 시비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WTO 법규에 부합하는 보호주의 조치라 하더라도 그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하는데, 상대국 역시 WTO 법규에 부합하는 다른 보복조치(예를 들어 개발도상국들이 실행관세[applied tariff]를 버리고 양허관세[bound tariff]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러한 ‘합법적이나 무역제한적인’ 조치가 주요 국가들에 의해 경쟁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 그것은 국제무역체제에 제앙과도 같은 것이다.

역의 기본틀을 지켜내려는 국내, 국제적 노력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심각한 보호주의로의 회귀나 갈등의 격화 없이 안정적으로 무역체제를 관리해 올 수 있었다. 중국을 위시하여 자유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자 그룹인 동아시아 국가들도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여 협력해왔으며, 이는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²⁵⁾

5. 위기와 동아시아 무역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동아시아 무역체제에 어떤 중장기적 영향을 미칠 것인가? 중요한 제도적 변화는 흔히 심각한 대내외적 위기와 도전을 거치면서 이루어진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아직 완전히 종료되지도 않은 현재의 시점에서, 이 위기가 동아시아 무역체제와 지역주의에 질적 변화를 가져올 격변의 서막이 될 것인지 아니면 관성적으로 유지되는 지역체제에 일회적인 자극만 주고 소멸하는 찻잔 속의 폭풍이 될 것인지 아직 예단하기는 이르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동아시아 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발현되는 시간과 공간 역시 매우 다차원적이다. 동아시아 지역주의, 지역협력 혹은 제도화를 논함에 있어, 우리는 지역의 무역레짐 뿐만 아니라, 외환/금융레짐, 개발협력과 공적원조, 환경협력, 인권, 공동위협관리, 정치·군사·외교 협력체제 등 여러 차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각각이 매우 긴밀하게 상호작용하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5) Hadi Soesastro, "6. East Asia must share Obama's leadership to keep trade open", in Richard Baldwin and Simon Evenett, eds., *The collapse of global trade, murky protectionism, and the crisis: Recommendations for the G20* (A VoxEU.org publication, 2009).

이 글의 초점은 이번 위기가 동아시아 지역의 무역체제와 제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이다. 결론적으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동아시아 무역체제에 격변의 서막이자 찻잔 속의 폭풍 둘 다 일 수 있다. 현재의 위기는, 지구적/지역적 차원에서 체제재편을 가속화시킬 물질적이고 근저적인 변화를 드러내 주었음은 물론 위기극복의 과정에서 이를 더욱 강화시켰다는 점에서, '격변의 서막'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제한적·수동적 무역자유화와 낮은 수준의 제도만을 유지해온 동아시아의 현 수준을 고려할 때, 현재의 위기가 무역체제 변화와 질적 도약의 계기가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즉, 위기의 직접적인 효과로 지역무역체제의 내용적·형식적 변화를 단기간에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1997/1998년 동아시아 외환위기와 비교할 때,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동아시아 지역의 구심력과 통합성을 높일 수 있는 유력한 물질적, 이념적, 제도적 토대와 조건을 제공해주고 있다. 우리의 관심은 왜 1998년 동아시아 외환위기 때 높은 기대와 공감대 속에 제기되었던 동아시아 무역통합과 경제공동체 건설의 주장들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변화된 (보다 유리해진) 조건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거의 제기되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수준 높은 경제통합이나 금융통합, 정치연합은 차치하고라도, 지역주의의 최초 단계인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의 형성조차 왜 아직도 요원한 이상처럼 간주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1998년 위기와 2008년 위기가 동아시아 지역에 미쳤던 상이한 영향을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래의 <표 6>은 1998년과 2008년의 위기로부터 도출되는 동아시아 지역 통합의 물질적, 이념적, 제도적 토대와 여건을 비교한 것이다. 먼저 지역통합의 물질적 토대라는 측면에서 볼 때, 2008년의 상황은 1998년과 비교할 수 없

이 강력한 경제적, 권력적 기반을 제공해준다. 1998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는 실물경제나 금융시스템의 위기라기보다는 유동성 위기였다. 상대적으로 자본시장의 규모가 작고 개방도는 높은 대다수 동아시아 국가들은 대규모 외국 자본의 급격한 유입과 유출, 이로 인한 환율폭등(화폐가치 급락)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다. 환율방어를 위한 외환보유고의 소진과 고갈, IMF 구제금융 신청이라는 수순을 거쳐 IMF의 극단적인 긴축 요구와 (과도하게) 강도 높은 구조조정 요구를 감내해야만 했다.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위한 경제적/물질적 토대의 측면에서 볼 때, 1998년 위기에서 대다수 동아시아 국가들은 직접적 피해자였으며 자력으로 위기를 극복할 경제적 능력을 갖추지 못했었다. 위기에서 한 발 벗어나 있던 중국과 일본 역시 해결사 역할을 담당할 의지와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 경제력과 결합된 정치·외교·군사적 권력의 측면에서도, 1998년은 미국이 냉전 승리의 후광을 입고 단극의 패권지배력을 행사하던 시기였다. 일본과 중국 누구도 전 세계적 차원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동아시아 지역 차원에서도 미국의 압도적 우위에 도전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한편, 순수하게 경제적 측면에서만 보자면 2008년의 위기는 동아시아국가들에게 그리 심각하고 결정적인 위기가 아니다. 중국을 비롯한 대다수 동아시아 국가들은 피해도 다른 지역에 비해 적었을 뿐 아니라 신속한 회복으로 세계경제성장의 기관차 역할을 했다. 위기의 극복과정에서 동아시아지역의 위상은 현저하게 상승했으며, 특히 중국은 세계경제를 떠받치는 두 거인 중 하나임을 미국과 전 세계에 명확하게 보여 주었다. 경제적 부상과 동반하여 중국의 정치·외교적 위상은 현저하게 격상되었으며, 이를 G-2 체제로 공식화하는 데 성공했다. 미국의 위기와 패권쇠퇴, 일본의 급격한 위축과 맞물려,

(아직 세계 전체 차원에서는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자신의 앞마당인 동아시아에서 중국은 이제 미국과 대등하게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영향력과 주도력을 발휘할 토대를 갖추게 된 것이다.

한편 지역통합의 이념적 토대 형성 및 그 수용과 관련해서도 양 위기 상황은 현격한 차이가 있다. 1998년 위기는 영미식 자본주의 이념인 신자유주의가 절정에 달했던 시기였다. 시장 만능, 국가의 후퇴, 복지축소, 규제 최소화 등 신자유주의 이념에 기초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은 유럽과 아시아, 선진 개도국과 후진국을 불문하고 유일한 정답처럼 떠받들어졌다. 권력화된 금융자본이 포진한 월가, 그에 포획된 워싱턴 정가 그리고 IMF와 World Bank의 세계경제기구를 통한 미국 경제이념의 전 세계적 유포를 의미하는 워싱턴 컨센서스는 신성불가침의 합의로 간주되었다. 반면, 2008년의 위기를 거치면서 신자유주의는 거센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자본주의 일반이나 신자유주의 전체에 대한 부정은 아니라 할지라도 시장 맹신에 대한 반성, 시장실패와 도덕적 해이에 대한 철저한 감독의 필요, 민주주의 심화를 통한 시장권력의 억제, 정부 역할의 강화와 시장-정부 균형회복 등 새로운 규제와 정부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는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후퇴하고 이제는 이에 맞서는 다양한 주장이 백가쟁명으로 등장하고 있다. 중국식 사회주의 발전모델의 세계적 전파를 시도하는 베이징 컨센서스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²⁶⁾ 현재의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확인되는 이념적 기반의 변화, 즉 신자유주의이념의 퇴조와 워싱턴 컨센서스의 쇠퇴가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북미, 유럽지역과 구분되어 동아시아 국가들로 구성

26) 베이징 컨센서스에 대한 소개로는 Stefan Halper, *THE BEIJING CONSENSUS: how China's authoritarian model will dominate the twenty-first century* (NY: Basic Books, 2010)를 참조할 것.

된 독자적인 지역통합을 시도할 이념적 토대가 (최소한 1998년의 위기와 비교하여) 유리하게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두 시기 제도적 조건의 상이함에 대해서는 긴 논의가 필요 없을 것이다. 1998년 위기 당시에 이 지역에는 제한적인 ASEAN과 유명무실한 APEC 외에는 동아시아 국가들 전체가 참가하는 정례화 된 모임이나 협의체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지역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집단 정체성의 핵심을 이루는 안과 밖의 구분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뚜렷한 의식이 없었다. 1998년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비로소 공식적 제도와 채널이 마련되기 시작했고 ASEAN+3(이하 ATP)가 동아시아의 지역적 범위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현재 동아시아는 가히 제도의 홍수라 할 만큼 촘촘하게 얽히고 활발하고 작동하는 공식적·비공식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 ATP, EAS(East Asian Summit Meeting), 한-중-일 정상회의(CJK-Summit Meeting) 등 국가 정상 간 회의를 필두로 산하의 각료회담과 실무자 회합, 트랙 1.5나 트랙 II 모임들이 다양한 이슈를 놓고 양자, 소수자, 혹은 다자적 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표 6〉 1998년과 2008년 위기 시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토대와 조건

	경제적 토대 (경제력)	권력적 토대 (정치, 군사, 외교적과위)	이념적 토대	제도적 토대
1997/1998 동아시아 외환위기	위기의 직접적 피해자 중국, 일본의 경제력 한계	미국의 압도적 우위	신자유주의의 전 성기, 워싱턴 컨 센서스의 절정	ASEAN, APEC 외 지역협력기구 부재
2008 글로벌 금융위기	경제위기의 성공적 극복 중국의 경제적 부상	미국과 중국의 G-2 체제 등장	신자유주의에 대 한 도전, 워싱턴 컨센서스의 쇠퇴	ASEAN, APEC 외 ATP, EAS, CJK- Summit 등 다양한 제도적 틀의 존재

하지만 1998년의 위기와 비교하여 2008년의 위기가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유리한 조건과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곧 지역통합의 진전이나 자유무역시대 건설에 낙관적 전망을 제시해주는 것은 아니다. 조건은 조건일뿐 의지와 능력을 갖춘 주체의 행동 없이는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의 위기와 그 극복과정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지역통합 동기가 강화되지 못하고 정체되거나 오히려 약화되었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왜 1998년 외환위기 때보다 물질적으로 강력해지고 이념적으로 숙성되고 제도적으로 두터워진 2008년 글로벌 위기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의 진전된 제도적 통합과 (무역)지역주의를 추진할 동력은 형성되지 못하는 것인가? 왜 글로벌 금융위기가 동아시아 무역체제의 제도적 변화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한 것인가? 그 답은 바로 지역통합에 유리한 토대를 제공하는 현재의 상황 자체에서 찾아져야 한다.

현재의 위기가 EAFTA 형성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지 못하는 까닭은 첫째, 위기 자체가 동아시아 국가들의 지역적 정체성, 동질성과 연대성을 확립할 만큼 심각하고 강력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우리(we)라는 집단 정체성(collective identity)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우리와 대립되는 대상으로서 그들(they)이 정립되어야 한다. 1998년의 동아시아 외환위기와 달리, 이번의 위기는 공동의 피해자로서의 동료의식, 우리를 억압하는 타자에 대한 집단적 대항의식을 형성시키지 못했다. 위기의 성격도 글로벌했고 회복도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며 극복의 방식도 경쟁적인 각개약진의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둘째, 동아시아 지역통합의 물질적, 이념적 토대가 강화된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지역전체의 역량이 균질하게 상승함으로써 가능하게 된 것

이 아니다. 중국의 비약적인 성장과 부상이 주된 동력이다. 중국의 급격한 부상에 대해 주변 국가들의 경계와 우려는 여전하다. 중국이 동아시아의 명실상부한 리더로서 지역통합과 공동체건설에 지도력을 발휘하는 방법으로는 북미에서의 미국방식과 유럽에서의 독일방식이 있다. 미국방식이 지역 내에서 누구도 도전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지역 패권국의 지위를 누리는 것이라면, 독일방식은 주변의 유력국가(프랑스)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지역 패권국의 지위를 누리는 것이다. 현재 중국의 딜레마는 미국만큼 강력하지도 독일만큼 세련되지도 못하다는 데 있다. 중국이 현재와 같은 고도성장을 계속한다면 20년 뒤에 중국이 독일방식을 따를 이유는 전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때까지 중국이 갈 길은 멀다. 중국의 성장에 의존한 동아시아의 통합력과 구심력은, 한편으로는 경제적 실익을 위해 주변 국가들이 중국에 편승(bandwagon)할 동기를 제공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강한 흡인력으로부터 자국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제적, 정치적, 외교적 대안을 마련하도록 강제한다(balancing).²⁷⁾

마지막으로, 대다수 동아시아국가들이 무역제도의 변화에 소극적인 이유는, 기존에 시도했던 여러 제도적 방안들이 이미 실패했거나 별다른 성과 없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1998년 위기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은 다양한 경로의 협력을 통해 지역통합을 진전시키기로 합의했으며, 무역의 영역에서 동아시아 국가들 전체가 참여하는 EAFTA의 구축을 중기적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역내 일부 국가 간 양자, 소수자 FTA 같은 제한적 성과가 있기는 하지만, EAFTA의 구상은 시나리오만 무성할 뿐 국가들의

27)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FTAAP(Free Trade Area of Asia-Pacific)에 대해 최근 ASEAN 국가들이 보이는 호의적인 반응은 이러한 balancing과 hedging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참여나 구속력 있는 합의로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²⁸⁾ 대다수 동아시아 국가들의 정치적 의지부족과 실패한 경험에 대한 학습효과로 인해, 2008년 글로벌 위기가 제공하는 유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 구축의 동력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6. 결론

2008년 글로벌 위기는 그 진원지가 세계경제의 중심인 미국이었다는 점, 금융부문에서 실물경제로, 미국에서 여타 지역으로 위기가 급속하게 전파되었다는 점, 동시에 폭락에 가까운 교역의 위축을 가져 왔다는 점 그리고 세계경제 거버넌스의 재편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 등 여러 면에서 1930년대 대공황에 비견되는 역사적 사건으로 간주할 수 있다. 미국에서 촉발된 것이기는 하지만 위기의 발생과 심화 그리고 회복의 전 과정에서 동아시아 국가들, 특히 중국은 현재의 위기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 글에서 우리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동아시아 무역체제의 관계, 위기가 동아시아 무역체제와 제도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위기의 원인과 관련하여 동아시아 국가 (특히 중국) 책임론은 미국의 책임회피를 위한 정치공세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수출의 가격경쟁력을 창출·유지하기 위해 인위적으

28) 여러 경로에 대해서는 문돈, 「동아시아 자유무역체제의 전망: 가능성, 한계 그리고 한국의 역할」, 제주평화연구원-한국정치학회 공동주최 - 동아시아 평화와 협력의 현황과 전망: 동아시아 다자협력의 모색 (2009)발표논문. 각 경로의 상이한 경제적, 정치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Changsoo Lee and Don Moon, "Impacts of Sequential Free Trade Agreements in East Asia: A CGE and Political Economy Analysis," *Global Economic Review*, Vol. 39, No. 4 (2010) 참조.

로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화폐가치의 하락을 추구해왔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후발개도국에서 이러한 정책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제한적·단기적으로 용인될 수도 있겠으나,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비축하고 있고 내부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받고 있는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이러한 정책수단을 남용하는 것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 하겠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국가 간 통상마찰과 갈등을 악화시킬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억제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글로벌 불균형이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파국적 방식으로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누구에게도 이익이 될 수 없음을 인식한다면, 만성적 흑자국과 적자국 사이에 불균형을 축소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과 타협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위기의 확산과 심화과정에서 동아시아 지역은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가장 빠른 회복을 보여 주었다. 2008년 위기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세계경제 회복과 위기 극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이번의 위기를 거치면서 중국은 세계 경제성장과 교역확대의 제1기여국으로 자신의 지위를 확고하게 했으며, 전 세계 주요 수출국의 대중국 수출의존도 역시 현저하게 상승했다. 위기의 여파로 역내무역의 비중이 축소되거나 정체된 여타 지역과 달리, 동아시아 지역은 역내무역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주변 국가들의 수출확대를 중국의 수입확대가 흡수하면서 나타나는 결과로서, 이를 통해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중국 수출/성장 의존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1930년대 대공황의 교훈이 가르쳐 주듯, 경제위기와 불황은 국가와 사회적 집단 모두에서 보호주의의 동기와 유인을 강화시킨다. 경제성장에서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있어 보호주의 확산은 글

로벌 위기의 파급효과 중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경제위기의 와중에 '점보 차별조치'나 반덤핑/상계관세조치 등 은밀한 형태의 보호주의(murky protectionism)는 이미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 (반덤핑/상계관세조치 등) 무역규율을 둘러싸고 지속되었던 무역분쟁은 글로벌 위기와 맞물려 무역전쟁으로 확대될 우려가 없지 않다. 하지만 현재 보호주의가 통제불가능한 수준으로 확산되었다거나 무역마찰이 심각한 수준으로 격화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 다자무역체제의 질서와 양립할 수 있는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보호주의 길들이기(taming protectionism)가 성공적일 수 있는 까닭은, 보호주의의 상호 파괴적 결과를 인식하고 이를 회피하려는 주요 국가들의 의지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촉진하고 뒷받침하는 다자무역체제의 원활한 작동 (감시, 압력, 분쟁해결 등의 영역에서) 때문이다.

글로벌 위기가 동아시아 무역체제의 변화에 미치는 효과는 무엇인가? 동아시아 무역체제와 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예고하는 격변의 서막인가 아니면 기존 제도의 관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소멸될 찻잔 속의 폭풍인가? 이 질문에 하나의 답을 양자택일 식으로 제시할 수는 없다. 현재의 위기가 지구적/지역적 차원의 무역체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경제적, 권력적, 이념적 토대의 변화를 형성·강화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지만, 반면 이 위기가 단기적·직접적으로 동아시아 무역체제의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1997/1998년 동아시아 위기에 비해 동아시아 지역통합에 더욱 유리한 물질적, 이념적, 제도적 토대와 조건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위기의 진행과정과 이후 회복과정에서 동아시아 자유무역시대나 (무역)지역주의를 적극적으로 주창하거나 옹호하는 흐름은 찾아보기 어

럽다. 글로벌 위기로서의 보편적 성격, 중국의 압도적 우위에 대한 주변국의 불가피한 경계 그리고 지난 10년 간 지지부진했던 지역협력과 제도화의 경험 등이 현재 동아시아 국가들에게서 나타나는 소극적이고 관망적인 태도의 주된 원인이다.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East Asian Trading System: a Prelude of Systemic Upheaval or a Storm in a Teacup?

Moon, Don

College of International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trade flow/regime of East Asian region. Throughout the beginning, proliferation, and recovery process, East Asian countries have played critical roles in the crisis. East Asian countries, especially China, have been criticized for contributing to the crisis by accumulating huge trade surplus and exacerbating global imbalances. During the crisis, however, China and East Asian countries demonstrated that they are the pillar of global economic recovery and the bulwark of global trade expansion. The growth/export dependence on China by major exporting countries and East Asian countries has also increased considerably after this crisis. Global protectionism such as jumbo discriminatory measures and trade-rule related measures, which had been rampant in the Great Depression of 1930s, seems to be successfully controlled and tamed by the collative effort of major trading states, with the institutional help of the WTO;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that provides effective monitoring and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It is too early to predict whether the ongoing crisis will be the prelude of the upheaval of the global/regional trading system or just a storm in a teacup not triggering serious changes in the system. Even though the crisis reveals the potential for fundamental changes of the trading system in economic, political, ideational, and institutional aspects, it does not seem to provide enough driving force to create a significant development of East Asian trade regionalism and free-trade institutionalization.

•Key words

global financial crisis, East Asia, China, trade regime, regionalism, east asian free trade area